

윤 “비대면 진료 디지털화...서류전산화·인감 디지털화”

판교서 ‘디지털 권익 보호’ 7차 민생토론회 “비대면진료, 의료서비스 디지털화 측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우리 의료인들이 해외 시장에 더 많이 진출하고 우리 의료산업이 발전할 수 있으려면 비대면을 위한 디지털화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도 국가들의 제도를 뛰어넘는 혁신이 있어야 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한 일곱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 서비스 제공’, ‘게임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 산업 조성’,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3개 주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먼저 비대면 진료에 대해 “비대면 진료는 중요한 의료 서비스의 디지털화라는 측면에서 봐야 되고,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봐야 된다”고 운을 뗐다.

윤 대통령은 “의료 서비스의 디지털화라는 큰 차원에서, 또 정보 이용이라는 것을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대단하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해외 시장을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고, 우리나라 의료인들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정도의 기반은 돼 있다”고 강조하며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후 비대면 진료 제한 상황을 짚으며 “오늘 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산업에 관해서는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관계에서 소비자 보호가 안 되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거나 시장이 커지기 매우 어렵다”며 “특히 소비자 보호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수의 소비자 피해 구제”라고 했다.

이어 “소위 소액 사기를 많이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또 그 사람들이 얻은 이익을 피해자에게 회수시키기 위해서는 사법 절차가 중요하다”며 “게임산업 증진과 피해 구제에 관한 법제를 저희가 포괄적으로 잘 만들어서 게임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

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게임 관련 소액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국가가 철저히 대응해서 게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표적 불공정 사례라 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많은 게임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게임에서 멀어져가는 안 될 것”이라며 “올해 초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소비자 보호 공약을 차질없이 지켜왔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행정서비스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정부 각 부처의 데이터베이스를 한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예를 들면 건축자재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이것을 원주에서 하는 게 좋은지, 울산에서 하는 게 좋은지, 제주에서 하는 게 좋은지 각 지방정부마다 여러 규제와 지원책이 다르기 때문에 한목에 알아서 구비서류별로 떼지 않고 디지털화돼 있는 자료들을 내서 한번에 가장 좋은 임지를 선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디지털 정부는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인데도 국민들께서 그 편의성을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며 “부처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



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어 “임가내 총 1500여 개의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고, 도입된 지 이제 110년이 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서류들을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면, 매년 7억 건에 달하는 구비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깨끗한 물과 공기를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못하게 규제하는 것보다, 물과 공기를 정화하기 위한 어

떤 기술 산업을 증진시킨다는 차원으로 크게 봐야 우리 산업과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후생이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희 게임 유통, 전소혜 디지털케어 대표이사,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의료·행정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 소상공인 등 국민 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전병국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김희면기자

황예원 북구의원,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다양한 분야의 활동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광주 북구의 회 황예원 의원(운암1·2·3동, 동립동)이 제 291회 임시회에서 청소년의 수련,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청소년활동 진흥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욕구에 따른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북구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 수립·시행 ▲ 청소년활동 진흥 사업 ▲ 청소년지도자의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황예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청소년활동 증진에 대한 정책적 지원 기반이 마련되어 7만 북구 청소년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31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와 오는 2월 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슬비 기자

민주, 이태원 특별법 재의안 의결 반발 “국민과 유가족 모욕”

박주민 “국민과 역사에 지은 죄 기억할 것”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지 마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할 생각을 엄두도 내지 마라”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길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며 “국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정부·여당이 159명 국민의 희생에 대해 책임 지지 못하겠다”며 대체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을 함부로 행사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지은 오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4선 홍영표 의원은 “지금껏 참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회피해왔던 윤석열 정부는 또 다시 권력을 남발해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입을 틀어막았다”며 “특별법은 거부해놓고 ‘최대 배상 지원’을 운운하는 천박함까지, 진정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안무치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이 시간에도 유족들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특별법 시행’을 목 놓아 외치고 있다”며 “누구의 책임인가, 재발방지를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가를 확인하려면 진상 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오섭 의원은 “유가족이 진정 원하는 것은 진실”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도 못했으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진실마저 감추려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정쟁 아닌가.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사유는 말도 안 되는 거짓”이라고 일갈했다.

민형배 의원은 “주권자 시민의 절절한 목소리는 외면하고 정부로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는데 무슨 정상 정부냐”며 “가족을 잃은 이들의 고통과 한숨, 눈물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이럴 수 없다. 정부 운영 어디 한 구석에서도 인간다움을 엿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서선욱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